
미국 LA 산불 및 보험사·감독당국 대응 현황

□ 배경

- (개요) ‘25년 1월 7일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(LA) 카운티에서 펠리세이즈 산불, 이튼 산불, 허스트 산불 등 3개의 주요 산불을 비롯한 7개의 산불이 발생
- (주요 요인) 23~24년 초 폭우로 자란 초목과 수풀이 그 후 건조한 기후로 인해 바짝 말라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, 허리케인급 강풍인 산타아나 바람이 불어 산불을 더 확산시킴
- (현재 상황) 계속되는 강풍으로 화재 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, 산불로 인해 1만2천채 이상의 건물이 소실되고 최소 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함(1/17 기준)
 - 1/16 기준 펠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의 피해면적은 각각 96km², 57.1km²이며 진압률은 각 22%, 55%
 - 이미 주내 보험사가 신규 가입과 갱신을 축소했고, 공공보험도 지급 여력이 충분치 않아 피해 보상에 난항이 예상됨
- (피해 규모) 아직 진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액의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하지만, 각 기관이 잠정적 추산치를 내놓고 있음
 - AccuWeather (1/14 기준): 총 피해액 및 경제적 손실 2,500억 ~2,750억 달러
 - Goldman Sachs (1/13 기준): 보험손실액 100~300억 달러

□ 보험사 대응

- 이번 산불은 특히 호화 주택이 밀집한 팰리세이즈 지역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, 보험업계에도 막대한 손실을 끼칠 전망
- 지난 몇 년간 캘리포니아 내 잇따른 산불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상태 악화로 이미 주요 보험사가 주택보험 신규 가입 및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, 주택보험료를 대폭 인상함
 - 캘리포니아 보험국에 따르면 ‘20- ‘22년 주 내 280만 건의 주택보험 계약 갱신이 보험사에 의해 거절되었고, 이 중 절반이 LA에 위치
- 캘리포니아 지역 최대 보험사인 State Farm은 작년 3월 주택·아파트 72,000건 갱신을 중단하였고, 특히 팰리세이즈 지역 계약건의 69%를 취소함
 - 또한 주 당국으로부터 ‘24년 7월 주택보험료 최대 20% 인상 승인을 받은 후, 뒤이어 주택보험료 30%, 임차인보험료 52%, 콘도 보험료 36% 인상을 추가 신청함
- 미국 주요 손보사인 Allstate는 ‘22년 이후 팰리세이즈 내 신규 주택 보험 계약을 중단했고, 최근 주 당국에 평균 34%의 주택 보험료 인상을 신청한 상황

□ 감독당국 대응

- (페어플랜*) 캘리포니아 내 민간 보험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주 정부가 관장하는 재물화재보험으로, 일반 주택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주택 소유주에게 기존 보험 대비 작은 보장범위를 제공함

* FAIR (Fair Access to Insurance Requirements) Plan

-
- 캘리포니아 지역 주택 9,000채 중 약 1,400채가 ‘24년 페어플랜에 가입했으며 이는 ‘20년 대비 4배 증가한 규모임
 - ‘24년 9월 기준 페어플랜의 주택보험 익스포저는 ‘20년 대비 3배, 전년 동기 대비 61% 급증한 4,580억 달러임
 - 하지만 페어플랜의 주택 보장한도는 최대 300만 달러이고, 재보험과 잉여 현금은 각 25억, 2억 달러에 불과해 고가 주택이 집중 피해를 본 이번 산불 보상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평가됨
 - **(지속가능한 보험 전략*)** 캘리포니아 보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‘24년 캘리포니아 보험국장 리카르도 라라가 발표한 개혁안으로, 올해 본격 시행 예정임

* Sustainable Insurance Strategy

- 주요 보험사가 산불 위험 지역 내 포괄적(comprehensive) 주택보험 체결 비율을 자사 주내 시장점유율의 최소 85%로 끌어올릴 것을 의무화
- 대신 보험사는 기후 위기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지 못했던 과거와 달리 사전 승인 받은 캣모델(catastrophe model) 데이터를 제출해 보험료 인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됨
- **(모라토리엄)** 1/9 캘리포니아 보험국장은 이번 산불에 따른 긴급 조치로 일부 지역에서 보험사에 모라토리엄을 발동
 - ‘18년 제정된 캘리포니아 상원법안 제824호에 따라 주지사가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해 1년간 보험사의 계약 해지와 미갱신을 금지하는 조치로 현재까지 총 20건 이상의 산불에 대해 적용함
 - 보험국장은 이에 더해 보험사에 본 산불 시작 전 90일 내에

갱신 거절이 이미 통보되었으나 효력이 그 후에 발생하는
건을 포함해 6개월 동안 진행 중인 계약 미갱신·취소를
중단할 것을 요구함

- (연방정부 차원 보상) 본 산불로 LA 지역은 재난 지역으로
선포되어 연방재난관리청(FEMA)의 복구 지원과 정부 보조금
등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음
 - FEMA의 총 지원 규모는 개인/가구당 4만 3,600달러로 제한되어
피해 규모에 비해 미비한 수준임
 - 과거 자연재해 사례를 볼 때,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은
의회를 통과하는 데만 3개월~1년 반이 소요되어 빠른 보상은
어려울 전망